지역 소상공인 대출 6억 지원

지자체 11곳 선정

행안부

19일 행정안전부는 '지역소상공인 희망대출 지원사업' 공모에서 21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국비 총 6억1500만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광주 광산구가 도입해 호응을 얻은 '1% 희망대출'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낮은 신용등급으로 담보제공이 어려워 금융권 대출조차 불가능했던 자영업자 등이다. 행안부가 운영 자금을 지원하고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자격요건, 한도, 이자율, 상황방식 등을 결정해 연내에 대출금을 지원한다.

행안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에게 소액 대출을 해 줄 계획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코로나 장기화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금융소외 계층 소상공인들이 이번 사업으로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광주시 광산구가 지난해 도입해 큰 호응을 얻은 '1% 희망대출'을 전국으로 확산한 것이다. 광산구는 이 사업으로 648명의 소상공인에게 47억원을 지원했다.

양일국 기자 kookie@meconomynews.com

이산화탄소 풀풀… 친환경 탈 쓴 '태양광 패널'의 민낯

WSJ "中 폴리실리콘 제조 위해 석탄발전소 증설"
패널 1장 제조에 '나무 100그루' 맞먹는 탄소 배출
국내 기업도 폴리실리콘 제조에 막대한 전기 사용
한화솔루션, 한솔테크닉스 등 탄소배출량 높아
국내 1위 OCI, 말레이 공장 '수력발전'으로 전기 수급


태양광 패널. 사진=시장경제DB

태양광 패널이 미래 신재생에너지를 대표하는 첨단 소재로 각광을 받으면서 '친환경' 이미지 뒤에 가려진 과도한 탄소 배출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동시에 높아지고 있다. 태양광 패널은 제조부터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서 상당한 양의 탄소를 발생시킨다.

폴리실리콘을 비롯해 패널 핵심 소재 생산에 막대한 전기를 필요로 하며, 그 전기의 대부분을 석탄발전을 통해 얻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친환경으로 포장된 새로운 형태의 환경파괴'라는 비판이 거세다. 수명을 다한 '폐 패널'이 토양오염의 새로운 원인 중 하나로 주목받으면서 태양광 산업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힘을 얻고 있다.

이달 초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글로벌 시장에서 유통 중인 태양광 패널 상당수는 대규모 석탄발전에 의존한 중국 기업들이 생산하고 있다. 태양광 패널의 원재료인 웨이퍼는 폴리실리콘을 정제해 만든다. 패널은 웨이퍼를 가공한 셀(태양전지)을 이어 붙여 조립하는 과정을 거쳐 제조된다.

중국 정부는 폴리실리콘 제조과정에 필요한 전기 생산을 위해 신장과 내몽골 등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를 짓고 탄소배출 규제를 풀었다. 그 결과 다량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석탄발전 의존도는 대폭 증가했다.

문제는 중국 공장에서 생산한 폴리실리콘이 전 세계 물량의 75% 이상을 차지한다는 사실이다.

GCL폴리 등 중국 기업들은 저렴한 석탄발전을 활용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고, 글로벌 공급망을 독식했다. 석탄발전을 지양하고 대체 전력을 사용하는 독일 '바커 케미(Wacker Chemie) AG'의 폴리실리콘 제조비용은 중국 기업과 비교해 4배 이상 높다.

미국 코넬대 펑치 유 교수는 WSJ에 "중국산 태양광 패널은 유럽산보다 이산화탄소를 두 배 이상 배출한다"며 "중국산 제품을 사용하는 국가는 탄소 저감 효과를 얻지 못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내 태양광 산업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국내 산업용 전기는 대부분 석탄발전을 통해 생산된다. 친환경을 구현한다는 태양광 패널 제조과정에서 다량의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폴리실리콘 제조 기업은 제조원가의 30~40%를 전기비용으로 지불할 만큼 많은 양의 전기를 소비한다.

국내 태양광 패널 완제품은 400W 출력량 평균 700kgCO_2/kW의 탄소를 배출한다. 30년생 소나무 1그루의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6.6kgCO_2로 알려져있다.

400W 출력 태양광 패널 완제품 1장을 생산하는데, 30년생 소나무 105그루 가량이 1년간 흡수하는 양과 맞먹는 탄소가 배출되는 셈이다.

태양광 패널 제작에 이처럼 막대한 양의 탄소가 발생한다면, 태양광 발전을 확대할수록 전 지구적 환경 생태계가 위협을 받는 역설이 벌어진다.

업계 전문가들은 '저탄소 태양광 패널'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태양광 부품 제조과정 별 전기사용량을 계량화하고, 석탄발전 대체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폴리실리콘 생산 국내 1위이자 세계 7위 기업인 OCI는 전기 수급 방식을 석탄발전에서 수력발전으로 전환했다. OCI는 지난해 태양광 패널용 폴리실리콘 공장을 말레이시아 사라왁주로 이전했다.

이 지역은 말레이 반도와 거리가 먼 오지에 위치하고 대규모 수력발전소가 인접해 환경보호와 전기 수급이 용이하다.

회사는 수력발전으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만큼 공장 증설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OCI는 2022년까지 말레이시아 공장 생산능력을 3만톤에서 3만5000톤으로 늘릴 계획이다.

OCI 관계자는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생산 중인 폴리실리콘은 대부분 현지 수력발전소에서 얻은 전기를 이용하고 있다"며 "2017년 인수 당시 전력 수급 방식을 그대로 유지해 친환경 발전을 실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준혁 기자 jshin2@meconomynews.com

Cannes Lions 수상작 지면 전시



2020 Outdoor Silver Lion Campaign

Title: AMANDA 아만다
Client: DOVE 도브
Agency: OGILVY LONDON
Product: DOVE MASTERBRAND 도브 마스터브랜드

Copy: Courage is beautiful 용기는 아름답다

"中企도 ESG 필수… 미준수 땐 퇴출 각오해야"

세종대 김대종 교수 한국경영학회 논문 발표
"가습기살균제 사건 환경 대참사… ESG 반면교사 삼아야"
"기업가치, 이윤창출서 정도경영·사회적 책임으로 옮겨가"


김대종 세종대 교수. 사진=세종대

올해 민관을 통틀어 최대의 화두로 떠오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관련해 앞으로 중소기업도 ESG를 지키지 않으면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가 나와 주목된다. 앞으로는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기술경쟁력 못지않게 ESG 경영이 바탕이 돼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세종대 경영학부 김대종 교수는 지난 16~18일 한국경영학회와 중소기업학회 등이 공동 개최한 제23회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에서 '중소기업 창업과 ESG'를 주제로 논문을 발표하며 "ESG가 부각되기 전까지 기업은 이윤창출만이 목표였으나 오늘날은 사회적 책임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됐다"고 역설했다.

김 교수는 국내 ESG 경영 안착을 위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례로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꼽았다. 김 교수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세계에서 유일한 환경 대참사"라며 "국내에서 1994년부터 2011년까지 판매한 가습기살균제로 1600명이 사망했다. 건강피해자는 67만명이고, 사용자는 전체 인구의 16%인 627만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이 이윤 창출에만 몰두하고 소비자안전 등 사회적 책임을 간과했기에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준 사건"이라며 "SK케미칼은 원료물질을 만든 후 독성검사 등 안전성 확인도 없이 제품을 공급했고, 가장 많이 판매한 옥시를 비롯해 애경·홈플러스·이마트·롯데마트 등 국내 유수의 기업들도 안전성 검사 없이 판매해 이익을 남겼다"고 부연했다.

김 교수는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사죄를 하고 배상을 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은 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ESG를 준수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퇴출당해야 한다. 법과 원칙을 지키고 ESG 책임을 다하는 기업만이 생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습기살균제의 경우) 정부는 18년간 가습기살균제 안전성 검사를 한 번도 하지 않고 판매를 허가했다"면서 "환경부·보건복지부·공정거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도 광고와 제품판매 등을 허가했으므로 책임이 크다"고 했다. 김 교수는 "정부는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기업에 대해선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정환 기자 eruca@newdailybiz.co.kr

한노총 택배 조합원 벌써 1000명… 민노총과 勢 대결

충청 강원등 가입 봇물
비노조원, 온건한 한노총 선호


민주노총 택배연대 집회모습. 사진=시장경제DB

택배 노동계가 양분화되고 있다. 유일 노조였던 민주노총 택배연대에 반하는 한국노총계 조직이 세를 불리고 있다.

교섭권을 지역 집배점별 과반 노조에 부여하는 탓에 양 단체의 신경전은 격화될 전망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노총 택배본부는 최근 소속 조합원이 1000명 가량으로 늘었다. 기존 활동이 없었던 비(非)노조 기사들의 가입이 대다수로 충청, 강원권 등에서 활성화 중이다.

한노총 조직은 민노총 택배연대의 과격한 운동방식에 반발해 출범했다. 지난 2017년 노조 필증을 받은 택배연대는 수차례의 전국적 파업, 태업을 이어왔다. 터미널에 배달 물량을 쌓아두거나 방치하는 상황이 대부분이었다.

처리하지 못한 일감은 같은 집배점 소속 비노조 기사들이 떠안았다. 같은 상황이 수년간 반복되자 현장의 불만은 커졌다.

이에 한노총은 "민노총 택배노조와는 방향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합원을 확보하고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택배연대는 약 6000명 규모다. 지난 3월 출범한 한노총 조직이 절반을 따라잡은 상황이다. 민노총 택배연대는 우체국, 민간택배사 두 갈래로 나눠 활동한다. 우체국과 민간 택배사의 사업 특성이 달라서다.

현장은 양 단체의 마찰이 심화될 것으로 내다본다. 택배기사는 직접 계약자인 지역 집배점을 상대로 교섭권을 갖는다.

단체 교섭권은 각 집배점 과반 노조에 부여한다. 제1노조를 각 집배점별로 다르게 선정하는 셈이다. 현장 관계자는 "강원, 충청 등 일부 지역에서는 한노총 소속 인원이 기존 민노총 단체를 넘어서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제1 노조 지위, 교섭권 확보 등으로 양 단체 조합원 간 마찰도 종종 있는 편"이라고 말했다.

김희진 기자 heejin@newdailybiz.co.kr